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비전, 정책목표, 추진과제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

2024-2028년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Contents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

01 수립 개요

02 수립 방향

03 정책환경 분석 및 시사점

04 비전 및 정책목표

05 추진과제

목적 · 근거

수립목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향 제시

법적근거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성격 · 기능

-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5년) 종합계획

구 분	부 처 명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부처(11개)	외교부, 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기타 재외동포정책 소관 부처 · 기관(8개)	보훈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중기부, 인사처, 방통위, 민주평통 사무처 등

- ✓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 · 의결(2023년 12월, 잠정)



종합적 · 체계적 · 지속가능한 범정부 재외동포정책 마련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 재외동포청 출범(23.6.5) 등 정책 환경 변화 반영 -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과거

성 격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

방 식

정책수립 · 사업이행 이원화

대 상

국내 거주 재외동포 정책 한계

통 합

부처별 동포민원서비스 분산 / 산재

현재

호혜적인 **동반성장**

정책수립 · 사업이행 **일원화**

국내 거주 재외동포 정책 대상 **포함**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

" 국정과제[100번]에 따라 재외동포 지원 정책 확대 · 강화 "

03. 정책환경 분석 및 시사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

정책환경01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위한
동포정책 수립
요구 증가

-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
- 대한민국-동포사회간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정책환경02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 · 포괄적
접근 필요

- 동포사회 구성 변화, 새로운 이슈 부상, 광범위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 · 선제적 대응 필요
- 다중위기와 거주국별 상이한 동포사회 요구에 맞춤 대응
-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체계적 동포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

정책환경03

재외동포 정책
공감대 확보 필요

- 동포정책 지지는 정책 추진 동력 확보의 기반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보가 주요 과제

전세계 재외동포의
튼튼한 울타리

비전

미션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정책목표 · 중점과제

1

재외동포 정책
강화체계 확립

- 1-1.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1-2.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2-1. 재외동포 교육 지원 강화
- 2-2.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 2-3. 한국 발전상 교육 및 확산
- 2-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운영

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3-1.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3-2.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 3-3.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
- 3-4. 편리한 동포 생활

4

한인 네트워크
구축

- 4-1. 지역·분야·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 4-2.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5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하는 동포 정책

- 5-1.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5-2. 글로벌 가치선도 기여

정책목표 0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1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법령 및 지침 정비

✓ 재외동포 관련 법령 정비

-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 ※ 재외동포기본법, 재외국민등록법 등 법령정비 소요
 - ※ 청 소관 법령 18개, 행정규칙 12개
- 동포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 신규 제정
 - ※ 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역사적 동포 지원 법령 등

✓ 제반 지침 내실화

- 행정규칙, 매뉴얼 등 정비 및 신규 마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범정부 중장기(5년) 종합계획 마련

- ※ 2024년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원년
- ※ 재외동포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 통해 종합계획 마련

✓ 연도별 시행계획 각 부처별 수립·시행

- ※ 20여 개 부처가 기본계획의 구체 실행 계획 수립



정책목표 0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2 범정부 협업 및 의견 수렴 활성화

범정부 정책 협의 강화

-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외교부장관) 심의 · 조정 기능, 실무위원회(재외동포청장) 협의 기능 강화
 - ✓ 재외동포분과위원회* 활성화 통한 실질적 현안 논의 강화
- * ① 법·제도 ② 차세대 동포·교육 ③역사적 특수동포 ④ 동포서비스 등

재외동포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정기적 정책 연구 실시

학술 세미나 등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병행



지역별 동포사회 실태조사 강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동포사회 당면 과제와 현안 파악 노력

재외동포 의견수렴

- ✓ 동포간담회 개최
 - 동포 다수 거주국가 현장 목소리 반영
-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주요 정책 수립 시 전문가 · 동포 의견 적극 반영

정책목표 0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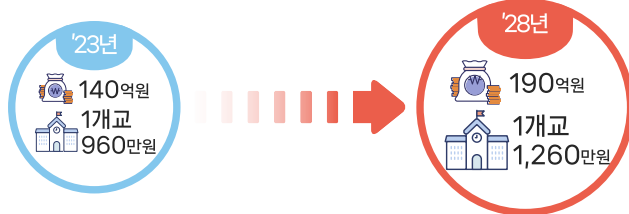
1 재외동포 교육 지원 강화

한글학교 지원 강화

한글학교 운영 지원

- 운영비 증액을 통해 교사 사기 진작

한글학교 운영 지원



- 교사 역량 강화(연수 확대, 수업 컨설팅 등)
-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센티브 제공 등

스터디 코리안 운영개선

- 학습 콘텐츠 개발 및 다양화
 - ('24년) 지역별, 대상별, 목적별 학습 요구분석
 - ('25~'27년) 교육자료 개발·보급
-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

한국학교 및 문화원 등 지원 강화

재외교육 기관 지원

- (한국학교)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교원 역량 강화, 수강료 지원 확대 등
- (교육원) 한국어·평생교육 지원 확대, 한인유학생 취업 멘토링 등 확대

한국어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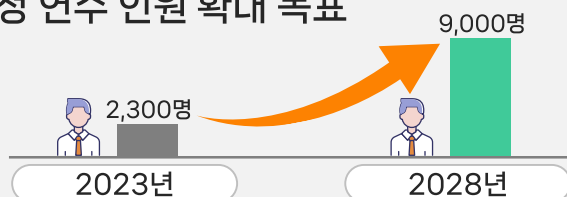
- 한국어 교재 지원·보급 확대
- 한국어 교원 대상 집중 연수

정책목표 0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②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규모 확대

- ✓ 한국 초청 연수 인원 확대 목표



- ✓ 지방정부와의 협력 통해 시너지 극대화
 - 매칭펀드, 시설확보, 지역활성화 기여 등
- ✓ 지역·문화다양성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강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

- ✓ 장학생 사후관리 강화*, 우수동포인재 활용
 - 매칭펀드, 시설확보, 지역활성화 기여 등
- ✓ 홍보통해 우수인재유치, 인지도확산
- ✓ 수혜자 중심의 사업 내실화
 - 대학 등록금 면제 범위 확대, 학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차세대 동포 국정참여 기회 확대

- ✓ 「차세대동포위원회」(가칭) 구성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세대 동포로 구성
 - 의견수렴 위한 개방형 플랫폼, 차세대 동포정책 실효성 확보



정책목표 0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③ 한국 발전상 교육 및 확산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 ✓ 차세대 동포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민간 네트워크 단체와 협업
- ✓ 한국 발전상에 국가별 맞춤형 내용을 추가

교류·협력 계기에 직접 전파

- ✓ 한글학교 교사 및 차세대 동포 대상 강연 및 교육 실시
- ✓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 시 전파

해외 전파를 위한 동포사회 협력

- ✓ 해외 교과서 및 매체 수록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
- ✓ 언론 기고, SNS, 개별학교 수업 등 지역 여론 형성
- ✓ 거주국 정부·교육관계자 이해 제고 추진

네덜란드 초등교과서, 한국을 "어업국가"에서 "고도의 산업국가"로..

Before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어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곳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이 손질되어 판매된다.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생선은 이러한 제품이다.

After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하여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한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대형선박을 주로 해외로 수출한다

정책목표 02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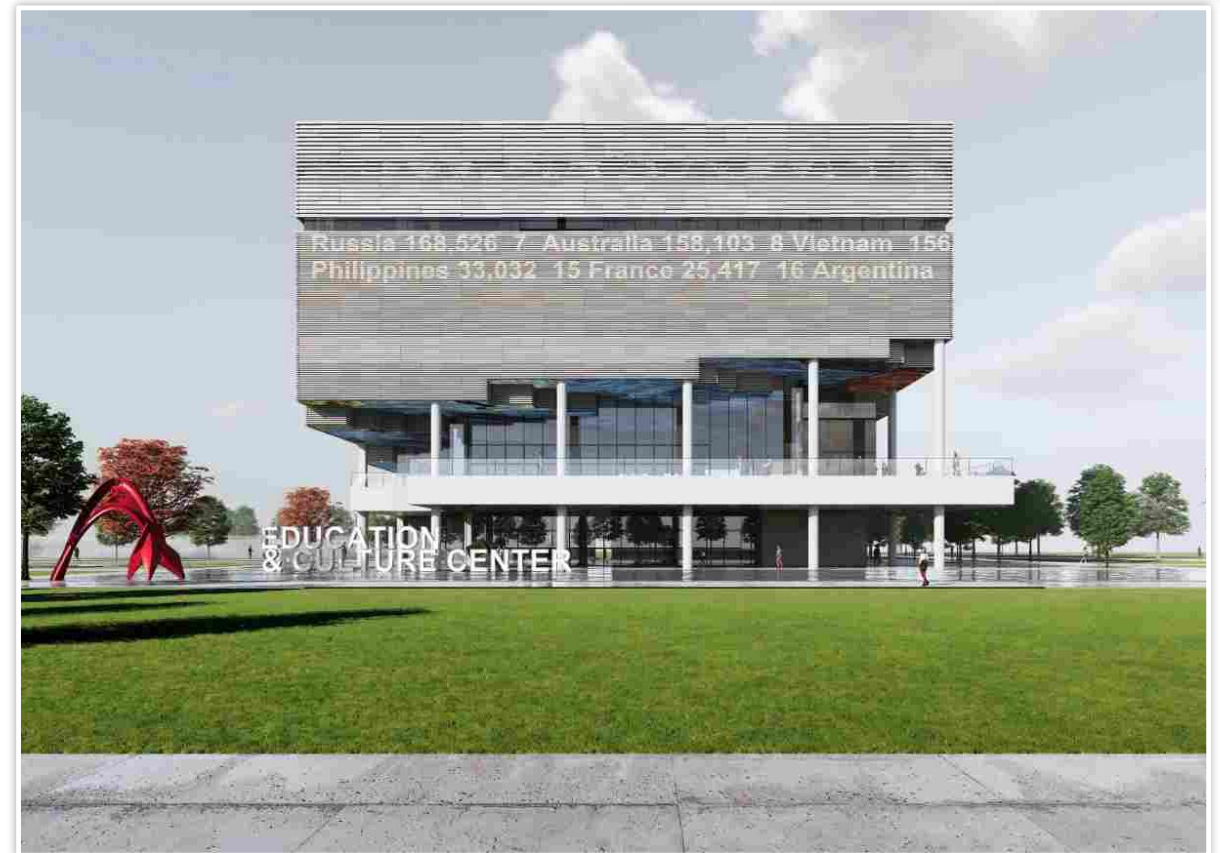
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

- ✓ 동포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 교육, 연구, 기념관, 박물관 등 복합 기능 수행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

- ✓ 센터를 통한 한민족 역량 결집 도모
 - 이민 역사 기념 상징 시설로 집중 관리
 - 내국인과의 교류행사, 체험학습 공간 제공 등



정책목표 0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1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선천적 복수국적 등 제도 운영 지원

- ✓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조항 개정 추진
- ✓ 국적제도 홍보·설명 강화(관계기관합동설명회홍보물제작등)
- ✓ 예외적국적이탈허가 제도 운용 지원
 - 선의의 피해자 구제 위한 유연한 제도운용 지원, 의견 개진
- ✓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지역 확대

해외 입양인의 권익 증진

- ✓ 美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 지원
 - 美의회 지지 확보 노력,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 지원
- ✓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아동 사후상담 및 방문, 모국방문·연수지원
- ✓ 추방·위기 입양인 한국 정착 지원(주거, 의료, 교육 등)
- ✓ 입양인 권익 보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국제입양에관한 법률」(‘25년 시행) 하위법령 정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등

고려인동포 지원 내실화

- ✓ 「고려인동포법」에 따른 실효적 지원 추진
 - 대상국가 확대, 경제적자립기반 마련 사업다변화
- ✓ 실태조사 강화, 정책수요자 의견 반영 맞춤형 정책·제도 정비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체계화

-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베트남 外 신규국가, 혼인유지 장애 빈곤 가족 등
- ✓ 민관협력 통한 한국초청캠프, 장학금 지원
- ✓ 보건의료 지원, 전문적 상담 및 법률자문

재외동포 대상 보건의료 지원

- ✓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재외동포 이주1세대 대상 보건의료 지원(‘23년 약 10.7억원)
- ✓ 우크라이나 긴급 보건·인도적 물품 지원

정책목표 0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②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 ✓ 피해동포 생필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절차 체계화
 - 신속한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수요 대응

- ✓ 사할린동포 지원강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사할린동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영주귀국 대상자 확대(직계비속 1명→자녀) 추진
- ✓ 지원사각지대에 있는 무국적 동포(조선적등) 처우 개선 노력(관련법 제정 검토 등)

재외동포 포용 및 모국방문 정책

- ✓ 계기별 모국 초청 행사 추진
 - ※ ('23년) 원폭피해 동포 초청, 파독 근로자 초청
 - ('24년)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초청 등
- ✓ 재외동포 발자취를 조명하는 기념 행사 병행
 - ※ ('23년)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정책목표 0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③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

국내동포 출입국·체류 관련 편의 제공

- ✓ 제도 상시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4시 안내(콜, 온라인)
 - 온라인·현지(재외공관) 제도 설명회 개최
- ✓ 여론수렴, 전문가 연구 등 제도발전 방안모색

모국 귀환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 ✓ 국내정착 토털 케어시스템 구축
 - (사전안내) 정착 안내서 배포, 교육 프로그램 홍보
 - (귀국직후) 영주 귀국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검토
 - (사후지원) '귀환 동포 정착 상담센터' 운영 추진
- ✓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체계 정비
 - 생활 실태조사(격년단위) 통해 불편사항 파악 등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 ✓ 지자체 협업 국내정착 지원
 - 정주 동포 간담회 실시 및 지원 방향 모색
 -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대상 우수 정책 발굴 및 확산
- ✓ 국내동포단체 지원 통한 동포권익 신장
 - ※ '23년 국내 23개 단체에 약 2.4억원 지원
- ✓ 취업 및 역량 강화 지원
 - 취업 가능 직종 맞춤형 알선 / 구직자 심리안정, 경력설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24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교과서 수록 추진
- ✓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
 - ※ 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등

정책목표 0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4 편리한 동포생활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 ✓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편의성 제고
 - 절차 간소화 위해 민원별 소관부처와 개선 추진,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병행
- ✓ 국내정착 지원 위한 현지전문가 상담 지원
 - ※ 해외신분, 현지 재산처분 등 민원 수요 多
- ✓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이용부담 해소
 -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 채널 다양화
→ 국제전화 사용료, 언어 등 부담 해소

디지털 친화적 동포민원서비스 제공

- ✓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통해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
- ✓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 방문민원의 50% 이상 온라인 제공,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목표

재외공관 민원 서비스 강화

- ✓ 영사민원 해외 문자·알림톡 안내
-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 ✓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추진

- ✓ 등록기간(90일) 경과 후에도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시스템 개선

정책목표 04

한인 네트워크 구축

1 지역별 · 분야별 · 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교류 · 협력 내실화

- ✓ 교류 · 협력 사업 정비 및 양질의 사업 발굴
 - 한인회장대회, 한인비즈니스대회 등 기추진 교류협력 내실화
 - 환경 · 사회 변화에 따라 신규 사업 발굴
- ✓ 전문가 대회 적극 지원
 - 과학자, 법률가, 경제인, 여성 등 네트워킹 강화 지원, 우수 인재풀 확보
- ✓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 코리안넷, 한상넷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용성, 활용도 제고

차세대 동포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

- ✓ 지역별 · 직능별 주류사회 진출 지원
 - 지역별 핵심 차세대 단체 발굴 및 육성
 - ※ '23년 차세대 단체 47개에 약 3.6억원 지원 ('23.10월 기준)
- ✓ 거주국 · 대륙별 현지 교류 활성화 지원
- ✓ 우수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관리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정부 주요직위 인선, 정책 자문 등에 범국가적 활용
 -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 개최 통해 우수인재 발굴

정책목표 04

한인 네트워크 구축

②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다변화

- ✓ 국내외 순환 개최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프로그램 강화
 - 프로그램 내실화, 참여업종 확대, 사무국 설치 및 상시 운영 등
- ✓ 유력 경제인 네트워크 확대
 - 동포경제인 인재풀을 통해 바이어 공급 등 국민 요구 부응 등
- ✓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 코리안넷, 한상넷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용성, 활용도 제고 위해 개편

차세대 동포 경제인 육성 지원

- ✓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내실화
 - 유망경제인 발굴과 육성의 장으로 활성화 도모
- ✓ 차세대 경제인을 핵심 경제리더로 양성
 - 해외 창업스쿨, 모국 방문교육 실시(OKTA)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및 취업 지원

- ✓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내실화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참여기업 검증 강화
 - 동포기업 인턴십 확장 검토, 인턴십 수요 높은 국가에 인턴십 제공 위한 비자 발급절차 개선 협력
 - 해외 구직 청년 교육, 연수, 취업 지원(K-MOVE 사업)

국내 중소기업 ·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 해외 거점 비즈니스 공간(GBC) 운영
 -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3개국 21개소 ('23년)
- ✓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지사 역할 대행
 - OK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목표 05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

1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쌍방향 협력체계 구축

✓ 재외동포 자문단 구성·운영

- 재외동포사회 의견 전달 및 정부 정책 협력 가교 역할
-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자문단 구성



재외동포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 재외동포 공공외교 지원 강화

- 동포단체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 '23년 10월 기준 공공외교 추진 20개 단체 8.9억원 지원
- 재외동포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시상

✓ 동호사회와 연대해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재외동포와 협업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의 성과 지속 확대
예) 美의회,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 채택(2007)
아르헨티나,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2023)
- 국가적 주요 시책·사업에서 동포들의 참여 기회 제공

정책목표 05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

② 글로벌 가치 선도에 기여

재외동포 대상 '세계시민교육' 도입

- ✓ 재외동포 대상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 세계시민교육 관련 회의 주최·참석 등 의제 확산



재외동포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동포사회의 통일·대북정책 이해도 제고
 - 해외 통일문화행사 개최, 동포대상 한반도 통일전문가풀 확대
 -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교육 자료 배포
 - 해외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

* 現 4개국(美中日獨) 119명으로 구성(임기 2년, '22.5~'24.4)
- ✓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통일캠프, 워크숍 등 실시
 - 국제학술회의, 통일포럼 등 전문가 공감대 확산
- ✓ 통일 공공외교 국제 지지 기반 강화
 - 민주평통 중심 공공외교 역량 결집 및 활동 협력



감사합니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